

2024

정당에 바란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Korea Federation of Volunteer Centers

 KOREA VOLUNTEER CENTER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KAV**(사)한국자원봉사학회



정당에 비린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언





# 목 차

<b>01</b>	<b>제안 배경</b>	05
<b>02</b>	<b>자원봉사로 모두가 안녕한 사회</b>	09
	▶ 동원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으로	
	▶ 사회가 인정해야 참여도 늘어난다	
<b>03</b>	<b>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원봉사법</b>	13
	▶ 자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 근거가 없어 교류도 힘든 전국 자원봉사센터	
<b>04</b>	<b>자원봉사관리자 직업 위상 제대로 서야</b>	17
	▶ 자원봉사관리 국가자격 제도	
	▶ 공무원과 민간인 어디쯤, 불안한 처우	
<b>05</b>	<b>융통성 없는 제도 때문에 민간 자원 농친다</b>	21
	▶ 제때 도움을 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기부금품법 필요	
	▶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소개 \_25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소개 \_26

한국자원봉사학회 소개 \_27



정당에 비린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언

## 01 제안 배경



한국의 자원봉사 섹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법·제도나 재정 지원이 증가하면 성장하고, 감소하면 쇠퇴하는 식으로 정부와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해 옴.

정부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매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음. 사회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지는 자원봉사 참여 양상과 참여 욕구를 반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성찰과 검토가 필요함.

자원봉사 참여 의사를 갖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기후변화와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 동향(통계청 사회조사)을 살펴보면 13세 이상 국민의 지난 1년간 참여율이 19.8%(2011)에서 10.2%(2023)로 10년 넘게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77.7%(2011)에서 10.6%(2023)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가의 미래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시민 참여의 장애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음.



정당에 바란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언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제정 이후, 20년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 없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원봉사에 제대로 참여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통합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 생애주기와 직업군에 걸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 40여 개에 달하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되지 못한 상태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지자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정합성을 검토하되, 지자체별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 준비가 필요함.

이에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한국자원봉사학회는 2024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제반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안을 각 정당 및 관계기관에 제안하고자 함.

2024년 2월 28일





정당에 비린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원봉사 활성화 정책 제언

# 02

## 지원봉사로 모두가 인정한 사회

- ▶ 동원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으로
- ▶ 사회가 인정해야 참여도 늘어난다

## 02 자원봉사로 모두가 안녕한 사회

- ▶ 동원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으로
- ▶ 사회가 인정해야 참여도 늘어난다



### 현황 및 문제점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힘을 토대로 유지되고 번영함. 따라서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공적인 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국가의 유지와 번영의 성과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해야 함. 2023년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행안부)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중 공식·비공식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17.3%로 성인 10명 중 1명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약 3조 2285억원, GDP의 약 0.1%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정부의 진흥정책의 목적에 비해서 행정의 실제적인 자원봉사 관리와 지원방식은 괴리가 있음. 많은 경우 행정의 필요에 대한 유사 동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공식적 언급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보조자로서의 기여, 단순한 선행에 대한 찬사에 머물러 있음.

자원봉사의 가치가 국가와 사회를 지속시키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위상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자발적 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함. 또한 자원봉사의 기여와 성과가 객관적 근거와 공식적인 위상을 가져야 함.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 등이 봉사자 개인에 대한 인정방식에 집중되고 있어, 다수의 자원봉사자의 기여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성과를 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자원봉사 인정 정책이 필요함.



## 정책 제안

### 1 자원봉사의 성과와 기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주간) 기념

매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성과를 집약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전 국민이 자원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봉사자들의 기여를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국가적 예우의 품격을 갖추.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낸 변화에 대한 사회적 감사 표시로서 기념 주간에 한 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식적이며, 전국적인 인정 제도 필요.

예) 12.5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국공립 시설 및 각종 문화시설 무료 이용

### 2 자원봉사 공익광고 쿼터제

자원봉사 가치의 확산과 공개적 인정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홍보물을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 함.

예) 공공기관 옥외시설 자원봉사 홍보물 연 15일 게시 의무화.

### 3 자원봉사 교과목 도입 및 경력 인정 제도

자원봉사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기 자원봉사 경험은 공감능력 향상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중고교 자원봉사 교과목 도입 및 학점 인정,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의 직업 선택과 경력 연결에 도움이 되는 인정제도가 필요함.

예) 공공일자리 채용 시 자원봉사 경력 인정 및 우대, 중고교 자원봉사 교과목 도입

### 4 국민의 자원봉사 기록을 관리하는 플랫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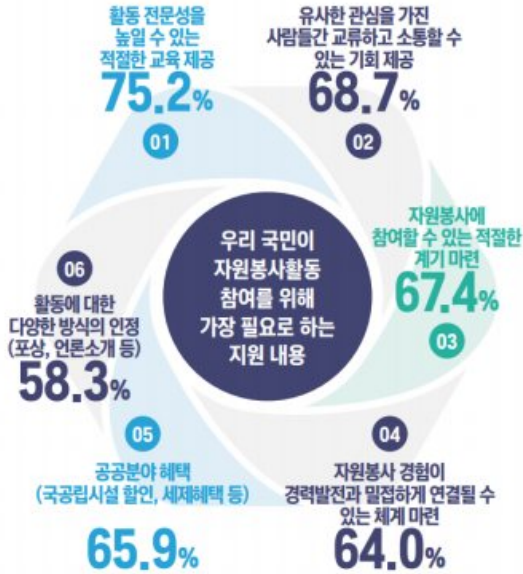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의 객관적인 기록을 담당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범국민적인 참여의 성과를 표현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인증 포털로 전환해야 함.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1365 자원봉사 포털 운영근거 신설

**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관련 자료

### ○ 우리 국민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



- 공공분야  
(국공립시설 할인, 세제 혜택 등)  
65.9%
- 자원봉사 경험이 경력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 마련  
64.0%
-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인정  
(포상, 언론 소개 등)  
58.3%

미국은 학교문화 또는 지역사회 문화에 자원봉사활동 및 자선후원활동이 내재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수의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수업보조, 현장학습 보조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 (중략)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 및 자선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학교와 지역

사회 및 종교기관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그렇게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학업 및 대학진학 또는 진로결정에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봉사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코리아, 2023.12.11. 코로나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급감한 한국, 미국·프랑스는 달랐다

URL <https://m.site.naver.com/1jm2w>



# 03

##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원봉사법

- ▶ 자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 ▶ 근거가 없어 교류도 힘든 전국 자원봉사센터

## 03

#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원봉사법

- ▶ 자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 ▶ 근거가 없어 교류도 힘든 전국 자원봉사센터



## 현황 및 문제점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 울산, 대구 등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1년 전국 245곳에 설치 완료되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처와 자원봉사계가 오랜 숙의와 토론 끝에 2005년 제정되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호 등을 아우르고 있음. 그러나 당시는 자원봉사센터 설립 초기로 자원봉사센터라는 인프라의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참여 인구와 활동의 범위 또한 지금처럼 다각화되기 이전이었음.

한국의 자원봉사는 1988 서울 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997 IMF 경제위기와 2007 서해안 기름 유출, 반복되는 재난재해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한결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옴.

1365자원봉사포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인구 또한 매년 늘어나 2002년 현재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규모와 내용적 측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음. 그러나 지자체 위주의 현행법에서는 적극적 시민의 창발적 참여를 확산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등에 있어 지자체의 영향을 받으며 자원봉사의 정치 중립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음.

※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인원 15,459,626명 (2023.12.31. 현재)



## 정책 제안

### 1 자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 2항 삭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조직 및 전문가가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력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편파적 운영을 예방하도록 함.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2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공유 시설 활용

자원봉사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관련 '특정 사업수행을 위해서만'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을 갖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 사무공간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목적'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용하도록 제16조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0년 행정안전부가 설치하였으나, 2006년 자원봉사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가 불분명함.

이에, 전국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센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화 함.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4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법제화 조항 신설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자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 제각기 운영되고 있음.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발전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언론 기사 발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문화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자원봉사 참여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고 비정기적인 참여자가 46.8%에 이른다. 단발성 자원봉사인 데다 활동 주기가마저 불규칙해 자원봉사 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 이사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게 다 사회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자원봉사 패러

다임을 ‘자기 주도적 활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직영 금지, 기부금품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그동안 6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사장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다.

서울신문, 2023.9.14. [이동구의 커피타임]

“자원봉사 사회화·인프라 구축… 자기 주도적 활동 문화로 정착해야” / 논설위원

URL <https://m.site.naver.com/1jm0J>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민간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과 지자

체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탓에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 대부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246개가 있다.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배제되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23.3.15. 자원봉사센터, 지자체에서 떼낸다... '진짜' 자원봉사하도록

URL <https://m.site.naver.com/1jm17>



OO도의 후진적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이 정책 편향적 센터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OO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옥규(OO5) 의원은 “광역 시도 중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곳은 OO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시도는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데 반해 OO은 직영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을 센터장으로 기용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출신 센터장은 OO도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스, 2022.11.10. 자원봉사센터 직영 고집 왜?...OO도 행감서 도마

URL <https://m.site.naver.com/1jm1s>



2005년 법 제정 이후 15년 이상 자원봉사센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직영방식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법 제정 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감신문, 2021.7.8. 박완수의원, 자원봉사센터 자율성 보장 법 개정안 발의

URL <https://m.site.naver.com/1jm1R>



# 04

## 자원봉사관리자 직업 위상 제대로 서야

- ▶ 자원봉사관리자 국가자격 제도
- ▶ 공무원과 민간인 그 사이 어디쯤, 불안한 처우

## 04 자원봉사관리자 직업 위상 제대로 서야

- ▶ 자원봉사관리자 국가자격 제도
- ▶ 공무원과 민간인 그 사이 어디쯤, 불안한 처우



### 현황 및 문제점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정, 감독,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로서 자원봉사 일감 설계부터 모집, 선발 및 배치, 교육 훈련, 지도, 위험 예방, 사후 관리를 총괄하는 일을 뜻함.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기업, 학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관리 직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자원봉사관리자가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 2021년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등을 기준으로 추산. (출처: 송민경 외, 2021. NCS기반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연구, 행정안전부)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3, 관계부처 합동)에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정책 과제화하고 자원봉사관리 국가자격 제도 운영을 목표로 삼음.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이를 누가 수행해야 하며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이는 불안하고 불공정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음.

유사 분야인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등에 사회복지사 채용과 교육,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음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산학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음.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미비한 기반은 아무나 자원봉사 관리 직무를 담당하게 하여 그 피해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국민과 도움을 받는 수혜자한테 미칠 우려가 있음. 자원봉사가 존재하는 한 자원봉사 관리 또한 지속될 것이기에 조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책 제안

### 1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 마련

자원봉사관리자가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격 제도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자가 양성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원봉사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산학 연계, 취업 훈련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경험을 쌓은 청년, 청소년이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입직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2 '자원봉사 관리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으로 정식 등재

자원봉사 관리사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자원봉사 참여 및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에 속하여 31,447명이 활동하고 있음(1365 자원봉사포털, 22.7.기준).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으로 정식 등재를 제안함.

### 3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맞춤형 보수체계 마련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경우,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등을 따르고 있는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음.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4 자원봉사센터 경력 100% 인정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을 80%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며, 양질의 인력이 자원봉사센터로 유입되는 데 장애요인이 됨.

## 참고 자료

### ○ 자원봉사 관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직업인이 되어야

2021년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223개의 대학 중 195개의 기관(87.4%), 145개의 전문대학 중 121개의 기관(87.4%)이 '자원봉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최근 대학기관 평가인증(한국대학평가원)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필수로 하는 평가기준이 확대되면서 대학의 자원봉사교육 수요는 더욱 증대하고 있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마련은 자원봉사 교육훈련과정의 체계화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사항이며, 대학교육에서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관리 교육의 확대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청년들의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도 자원봉사관리사 자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표>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관련학과 교과과정

학과	교육훈련기관		
	구분	계	기관명
전(체) 학과 (교양 및 전공 모두 포함)	대학교	195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전문대학	121	ICT폴리텍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등

교육훈련기관			
구분	과목명	내용	비율
대학교	사회봉사, 자원봉사론,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 등	기초공통	57.8
	약료봉사, 예술봉사, 군복무 사회봉사 등	고유/특성화	8.0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실습, 지역사회봉사 등	현장 활동/실습/실기	34.2
전문대학	사회봉사, 자원봉사론, 인간관계와 사회봉사, 지역사회와 사회봉사 등	기초공통	54.2
	창업뷰티사회봉사, 녹색봉사 등	고유/특성화	4.9
	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현장 활동/실습/실기	40.9

※ 출처 : <http://www.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공시자료 참고

### ○ 자원봉사관리자 국가공인 민간자격과정 로드맵 연구(2019,이금룡 외)

영국에서는 국가직무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의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 관리자가 가져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05

## 융통성 없는 제도 때문에 민간 자원 놓친다

- ▶ 제때 도움을 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기부금품법 필요
- ▶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

## 05

# 융통성 없는 제도 때문에 민간 자원 농친다

- ▶ 제때 도움을 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기부금품법 필요
- ▶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발굴 및 후원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의 자원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나, 관련 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기부금품을 지원받는다고 할 지라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심사위원회는 일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수혜자 지원 중심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즉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현금·현물 지원을 통한 기업 봉사활동의 경우 추진이 어려움. 더욱이 재난재해의 경우 지역사회 기업 및 후원자들이 후원하고자 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복구에 차질을 줄 수 있음.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될 경우, 높아지는 지역사회 수요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의 증액과 인력의 충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



## 정책 제안

### 1 자원봉사센터의 기부 심의 절차 간소화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후원받을 경우, 자체적 기부 심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기부 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에 맞는 기부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양한 민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2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

갈수록 더욱 다각화 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 현장으로 연계해 내기에는 사회적 자원이 형성되지 않아 일선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을 설치하여 자원봉사 지원의 시의성, 효과성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등 각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참고 자료

### ○ 202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p.40(행정안전부)

#### 참고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대 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주요내용 : 국가 등은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용도, 목적이 지정된 기탁금품에 한하여 행정 목적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자치단체 세정과 또는 자치행정과 등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15)

-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 모집과 기탁물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
  - 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기업단체와의 협업에 제약이 따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2012년 11월 21일 국회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2699)과 2015년 10월 27일 국회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17402)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김현 의원 발의안은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반면 진성준 의원안은 자원봉사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함
-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은, 민간주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제한하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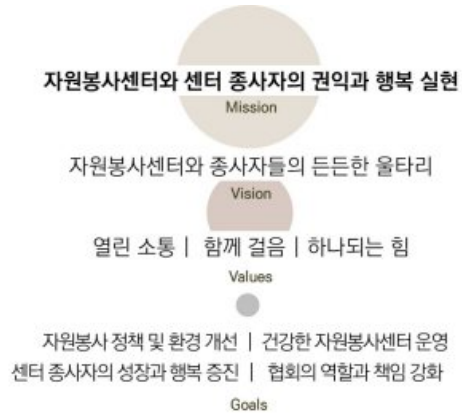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소개

## 일반현황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정연욱
설립연도	2000년 12월 20일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9, 702호
홈페이지	www.kfvc.or.kr	연락처	02-715-8008
		팩스	02-715-8011
설립목적	본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회원센터의 권익증진과 균형발전에 힘쓰며 민주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관소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전국 자원봉사센터들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의 근본 가치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배양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중심기구입니다.



##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회원센터 현황

- **근 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설치 (1개 중앙, 17개 광역, 228개 기초)
- **회원센터** : 전국 239개 자원봉사센터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	26	17	10	11	6	6	6	1	32	19	12	16	15	23	23	19	3
회원	1	23	17	10	11	6	6	6	1	32	19	12	16	15	23	23	15	3

## 주요사업

전략 사업			
자원봉사 의제확산 사업	자원봉사관리자 권익증진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	자원봉사관리자 성장지원
• 자원봉사 정책포럼 • KFVC협회보 발간	• 세계자원봉사관리자의날 기념 홍보 캠페인 • 똑똑상담소 운영	• 교육과정 운영 • 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	•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연수/연구 프로젝트
협력 사업			
위상강화사업	역량강화사업	기업협력	자원연계
•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 센터종사자 포상	•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 • 신입 센터장 교육	• BK참!좋은사랑의밤차 • 기업협력 사업	• 후원금품 지원사업
조직 사업			
조직 관리	홍보 및 브랜드 관리	조직 운영	
• 총회 및 이사회 • 유관기관 네트워크	• 홈페이지 및 SNS관리 •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인사 및 인력 관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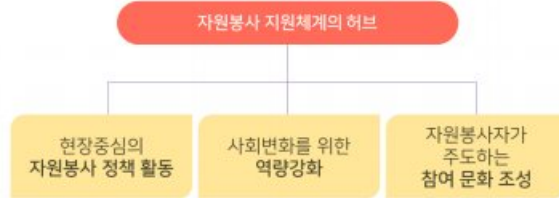
## 일반현황

기관명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운애 (센터장 김의욱)
설립연도	2010년 6월 (법인전환 2020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3층
설립주체	행정안전부	설립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홈페이지	www.v1365.or.kr	연락처	02-713-0080
		팩스	02-711-0887
설립목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국가 자원봉사 정책활동과 문화 확산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비전체계도

비전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로 만드는 안녕한 대한민국




## 주요사업




**전국민 자원봉사 참여 촉진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

-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그린 волон터 네트워크 구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관리체계 정비·개선**

- 1365자원봉사포털 정비·자원봉사 활동관리 체계 개선
- 자원봉사자 인정·예우문화 개선
- 자원봉사 경험의 자산화



**협업과 연대 강화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확대**

-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개선, 자원봉사 성과측정을 위한 기술 활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강화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15,459,626명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외 12개

자원봉사기록  
17,329개



자원봉사활동처  
44,739개

자원봉사단체  
89,243개

VOLUNTEER ARCHIVE

**자원봉사 아카이브**

2023.12.31. 기준



## 한국자원봉사학회 소개

### 일반현황

기 관 명	(사)한국자원봉사학회	회 장	정 진 경
설립연도	2016년 1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홈페이지	www.kaov.or.kr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93길 42 만리서재	연 락 처	010-9205-1114
		이 메 일	volunteerism1@naver.com
설립목적	본 학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훈련 및 교류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원소개(7개 분과 / 이사 40명, 감사 2명)

<b>학 회 장</b> (정진경_광운대 교수)			
<b>대외협력 부회장</b> (최유미_부산디지털대 교수)			
<b>연구 부회장</b> (최권호_경북대 교수)	<b>학술 부회장</b> (김육진_서울시립대 교수)	<b>편집 부회장</b> (김유나_유한대 교수)	<b>공동편집위원장</b> (이선우_공주대 교수)
<b>총무위원장</b> (이종화_강남대 교수)	<b>교육위원장</b> (권현수_경남대 교수)	<b>윤리위원장</b> (이상우_목원대 교수)	
<b>사 무 국</b> (사무국장_김남희, 감사_조성하)			

### 주요사업

- **학술대회 개최(연2회, 전기/후기)**
  - 2023 전기(2023.06.11) 청년, 사회적 주체로서 자원봉사 여정을 가다
  - 2023 후기(2023.12.08.) 과학의 눈으로 본 자원봉사
- **학술지 발간 등 출판사업**
  - 「한국사회와 자원봉사 연구」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2023)
- **연구용역 수행**
  - 자원봉사관리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연구(2019, 2020, 2021)
  -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2022)
  - 2023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2023)
  - 자원봉사관리사 자격제도 기본교재 개발 연구(2023)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2023)
-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지원봉사해서 행복한 대한민국**





**지원봉사해서  
행복한 대한민국**